Ⅲ. 일 본

□ FY 2008: 2008. 4 ~ 2009. 3

□ 출처

- 平成20年度予算政府案 (2007.12.)
- 平成20年度税制改正案の概要(2008. 1.)
- 平成20年度租税及び印紙收入予算の說明 (2008. 1.)

□ 환율 : 100엔 = 약 789.81원 (약 0.85 미국달러) (2007년도 평균)

<요 약>

◇ 경제 및 재정전망 : 일본 경제는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며, 일본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안정적 인하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추진

◇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: 「기본방침 2006」을 반영하여 세출을 재검토하고, 「기본방침 2007」에 따라 예산 중점 배분 및 효율화 등 재정개혁 단행

○ 공공사업, 지방재정,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세출개혁 철저

○ 성장력 강화, 지역활성화, 국민생활의 안심・안전, 환경, 공교육 확립 등 분야에 예산 중점 배분

○ 수의계약 재검토, 예산집행조사 결과 및 회계검사원 지적사항의 적극 반영, 특별회계의 재검토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 도모

◇ 세입 및 주요분야별 예산

○ 국채발행액은 0.84조엔 감소하였으나 조세수입 및 기타수입이 약 2.37조엔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약 1.53조엔(0.2%) 증액

○ 일반세출예산에서 지방특례교부금・지방교부세교부금・중소기업대책비 등은 증가한 반면 공제연금관계비・국채비・공공사업관계비 등은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0.2%(약 1.53조엔) 증액

◇ 2008년 세제개정 : 법인・중소기업관련세제, 금융・증권세제, 토지・주택세제 등 개정 통해 '08년도 세수 40억엔 감소 전망

1. 경제 및 재정전망

가. 경제상황과 전망

□ 2007년 일본 경제는 기업 부문의 안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이 완만한 수준에서 지속

○ 하지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,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택 건설의 감소, 서브프라임 주택융자 문제를 배경으로 한 금융 자본시장의 변동 등이 경기 저해 요인으로 대두

□ 2008년에는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률이 2.0%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

○ 세계경제 회복과 기업 부문의 안정의 지속, 가계 부문의 완만한 개선, 「자립과 공생」을 기본으로 한 개혁 조치의 가속·심화 및 정부·일본은행의 공동대응 등에 따라 개선 전망

○ 건축경기 위축의 장기화, 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,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의 심화, 신흥시장의 버블 붕괴 위험 등은 여전히 risk 요인으로 작용

<표 Ⅲ-1> 2008년도 주요경제지표 전망치

구 분	2007		2008	
	명 목	실 질	명 목	실 질
G D P	0.8	1.3	2.1	2.0
민간최종소비지출	1.0	1.3	1.2	1.3
민간주택투자	- 11.2	- 12.7	10.4	9.0
민간기업설비투자	1.7	0.9	3.9	3.3
정부최종소비지출	1.3	1.6	1.2	1.1
공적고정자본형성	- 4.7	- 6.1	- 4.0	- 4.9
재화서비스 수출	9.1	7.1	6.5	5.2
재화서비스 수입	8.0	1.5	5.2	3.6
국내수요기여도	0.5	0.5	1.8	1.7
해외수요기여도	0.3	0.9	0.3	0.4

자료: 재무성, 2008. 1.

나. 재정상황과 전망

□ 재정수지 및 기초재정수지의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

○ 재정수지 및 기초재정수지의 안정화가 지속되고 신규 국채발행액은 감소하는 추세

○ 국가 채무는 여전히 일본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

- 국가채무액은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, GDP 대비 국가채무 의존도 역시 감소하고 있으나 30%를 상회

- GDP 대비 중앙·지방정부 총 장기채무액도 약 147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

□ 일본정부는 2011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한다는 목표 제시

○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액 비율을 안정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

- 「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」(이하 '「기본방침 2006」')에서 정해진 세출 개혁 방침의 지속적 시행을 위하여, 「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」(이하 '「기본방침 2007」')을 제정하고 추진
- 또한, 신규 국공채 발행액을 4년 연속 감액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중점 배분

<표 Ⅲ-2> 재정수지, 국채 신규발행액 및 국가채무액, GDP 대비 국가채무 의존도 추이

(단위: 조엔, %)

연 도	2005	2006	2007	2008
재정수지(GDP 대비)	- 6.4	- 2.9	- 3.4	- 3.8
기초재정수지(GDP 대비)	- 5.6	- 2.1	- 2.5	- 2.9
국채 신규발행액	34.4	30.0	25.4	25.3
국가채무액	526.9	531.7	546.7	553.3
국가채무 의존도(GDP 대비)	41.8	37.6	30.7	30.5

자료: (기초)재정수지는 Economic Outlook(82호), OECD, 2007.12.
그 외는 재무성, 2007.12.

<표 Ⅲ-3> 국가채무 비율의 국가 비교

('08년도 기준, GDP 대비, %)

국 가	일 본	이태리	프랑스	독 일	미 국	캐나다	영 국
채무액 비율	147	116	73	65	64	62	49

자료: 일본의 경우, 중앙·지방정부 통합 장기채무 잔고(2008년말 전망치, 재무성).
타국의 경우, Economic Outlook(82호), OECD, 2007.12.

<참고> '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' 주요내용

인구감소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장 지속 위해 일인당 생산성 향상이 절실함.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재정개혁 시행.

- 성장력의 강화
  - 성장력 가속 프로그램, 글로벌화 개혁, 노동시장 개혁, 지역 활성화
- 21C형 재무행정 시스템의 구축
  - 세출·세입 통합 개혁의 실현, 세제개혁의 기본 철학, 예산제도 개혁, 공무원 제도 개혁, 독립 행정법인 등의 개혁, 자산 채무 개혁, 시장화 테스트의 추진, 지방 분권 개혁
- 지속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
  - 환경 立國 전략, 교육 재활성화, 저출산 대책의 추진·재도전 지원, 질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구축, 치안·방재・에너지 정책 등의 강화, 다양한 life style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

2.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

가. 예산기조 및 중점사항

□ 세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삭감 단행

○ 지금까지 추진된 세출 개혁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,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 대해 「기본방침 2006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삭감 단행

□ 중점사항

○ 신축적인 예산 편성

- 성장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양축으로 하는 「경제·재정 통합 개혁」의 취지에 따라, 세출에 대한 신축적 재검토
- 「성장력의 강화」, 「지속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」에 대한 조치를 추진하며, 이에 관련된 예산 측면의 조치사항 시행

○ 예산원칙에 따른 규율 있는 재정 운영

- 21C형 재무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규율 있는 재정 운영 시행
- 이 원칙에 따라 각 府省은 신규 시책의 예산에 있어 기존 시책의 폐지·감축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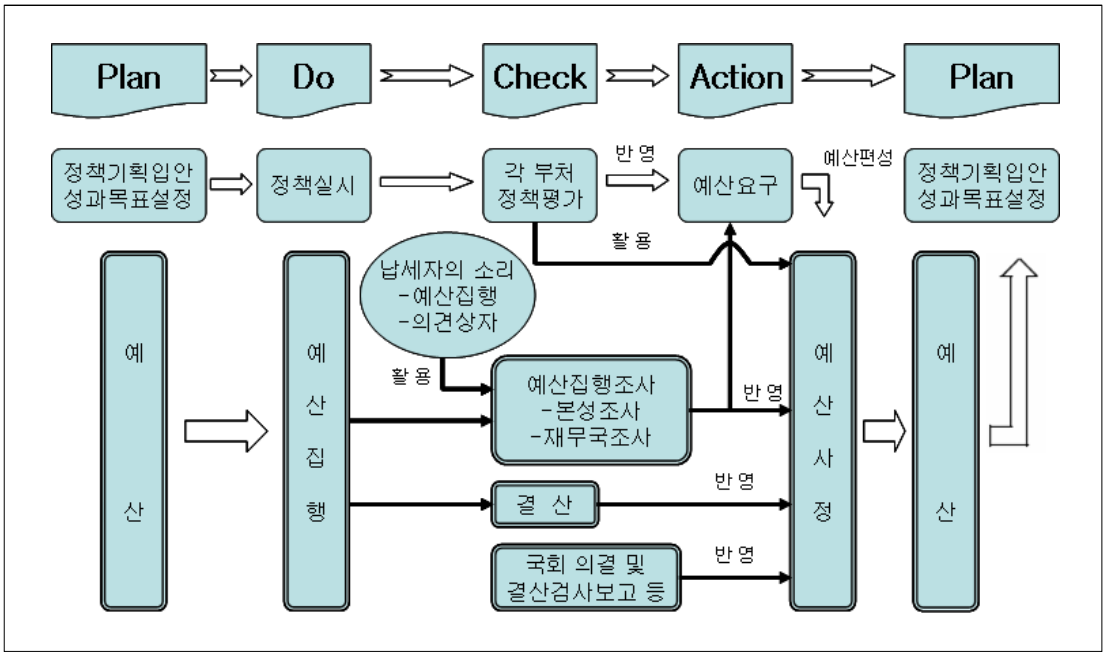
○ 중기 목표에의 부합성에 대한 점검

- 2008년도 예산이 중기 재정 건전화 목표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 시행

○ 예산과정에서의 PDCA(Plan, Do, Check, Action)의 강화

- 각 府省의 예산 요구 시 성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후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, 필요성・효율성・유효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

[그림 Ⅲ-1]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위한 PDCA 사이클



자료: 재무성, 2007.12.

○ 행정의 슬림화·효율화 등

- 「행정개혁 추진법」에 따라, 사업의 구분·재검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강화
- 총인건비 개혁이나 특별 회계 개혁, 자산 채무 개혁 등을 2008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
- 또한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, 민간부문의 활용이나 시장화 테스트를 추진하는 등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비 삭감 도모
- 재정투융자에 대해서는, 民間部門 보완의 원칙 아래 대상 사업의 집중화·효율화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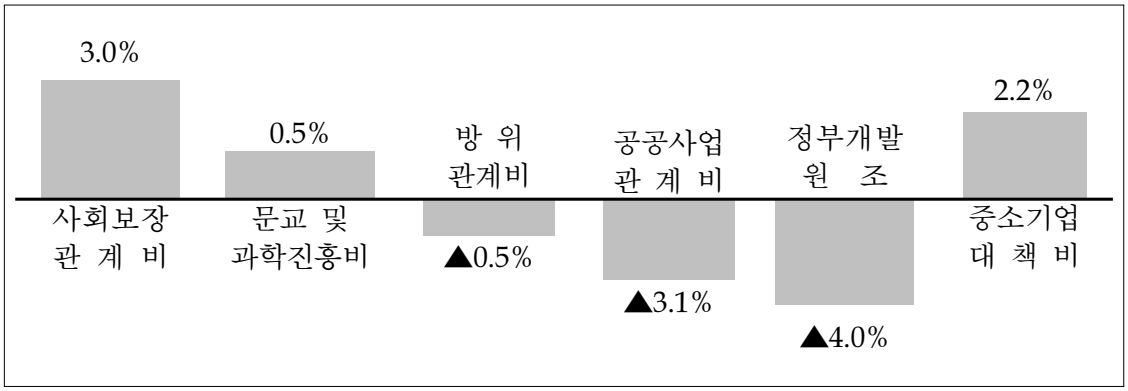
나. 08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

□ 세출개혁의 철저

: 「기본방침 2006」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해 제시된 세출 개혁의 지속적 시행

[그림 Ⅲ-2] 주요경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

(당초 예산 대비)



주: 중소기업 대책비는 정책 금융 개혁에 의한 제도 변경에 따른 증가분 제외
자료: 재무성, 2007.12.

○ 공공사업

- 3% 삭감하면서 지역 자립·활성화, 안전·안심의 확보 등에 중점 배분
- 지출구조 개혁이나 입찰시스템 개혁의 강화와 함께 사회자본의 장기 수명화 등 기존 stock의 효율적 활용 추진
- 도로특정재원에 대해서는, '정부·여당간 합의('07.12.7)'에 근거해 잠정 세율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 정비를 시행하며, 이를 위해 2007년도의 1,806억엔을 상회하는 일반 재원 1,927억엔 확보

○ 지방재정

항 목	증 감
급여 관계 경비	약 0.3조엔 삭감
투자적 경비(단독)	약 0.3조엔 삭감
일반 행정 경비(단독)	약 0.1조엔 삭감
지방세 불균형 시정 위해 지방 교부세의 특별기준 신설	4,000억엔(지방재활성화대책비) (첫해에는 불균형 시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, 임시재정대책채에 의해 재원 확보)

○ 사회보장

- 다음 제도·시책을 재검토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수반하는 세출을 2,200억엔 삭감

항 목	증 감
진료 보수·약값 등 개정	약 660억엔 삭감
후발의약품의 사용 촉진	약 220억엔 삭감
피고용자 보험에 의한 정부관장 건강보험 지원	약 1,000억엔 삭감
기타 제도·시책의 재검토	약 320억엔 삭감

○ 기타

<문교·과학기술>

- 세출 삭감 방침을 철저히 이행하면서도 「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의 확립」에 이바지하는 시책에 집중
- 과학기술진흥비에 대해, 국가 기간 기술 등에 자원을 전환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프로젝트는 폐지·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1.1% 증액

<ODA> :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(정부개발원조)

- 현존하는 ODA 사업량은 유지하면서도 ODA 전체적으로는 4% 삭감

<공무원 인건비>

- 국가 공무원 인건비 457억엔 삭감(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純計)

  · 정원 : 2007년도(2,129명 감원)의 약 2배인 4,122명 감원 확보

  · 급여 : 급여 구조개혁, 인사원의 억제 권고 등을 예산에 반영

□ 예산의 중점 배분 : 「희망과 안심」 중심

구 분	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성장 분야 육성	차세대 슈퍼 컴퓨터 정비	145억엔(＋68억엔)
	재생 의료 구현 프로젝트	20억엔(＋10억엔)
	희귀금속(rare metals) 개발 추진	10억엔(신규) (특별 회계 포함시 112억엔)
생산성 향상 (인재·중소기업 육성)	신진인력 지원 사업	21억엔(신규)
	지역 이노베이션(innovation) 협력 프로그램	97억엔(신규)
물류 인프라 정비	중추 항만의 정비	601억엔(＋77억엔)
	공항 등 기능 고도화 사업	204억엔(＋56억엔)

○ 성장력의 강화

○ 지역의 활성화 : 지방 활력의 재활성화 통해 일본 전체의 경제성장 도모

-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

  ·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, 이를 위해 지방법인 특별세 및 지방법인 특별 양여세 창설

  * 약 3,700억엔 세수 移轉 예상(평년 기준)

- 지방 교부세의 특별기준(지방 재활성화 대책비) 마련

  · 지방세 불균형 시정 위해 지방 교부세의 특별기준(지방 재활성화 대책비 : 4,000억엔) 마련.

  * 첫해에는 불균형 시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, 과도기적 조치로서 임시재정 대책채에 의해 소요 재원 확보

- 도로특정재원에 의한 지방 지원

· 지방도로정비 임시 교부금에 대해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부율을 인상(현행 55%, 최대 70%)하고 무이자 대출 제도 신설(5년간 5,000억엔 규모)

- 지역 재활성화 위한 종합적 조치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지방의 활력 재활 사업	25억엔(신규)
국토 형성 사업 조정비	350억엔(신규)
지역 자립·활성화 교부금	250억엔(+50억엔)

- 지역 주민의 생활의 확보·질 향상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마을 발전 교부금·지역 재활성화 교부금	3,956억엔(+108억엔)
지역 공공 교통의 유지·재활성화	197억엔(+ 32억엔)

- 지역 기반 산업의 재건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경영력 향상·사업승계 등 선진적 지원 체제 구축 사업	52억엔(신규)
농어촌 지역 재활성화 대책	60억엔(신규)

○ 국민 생활의 안심·안전

- 안심되고 질 높은 의료의 확보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의사 확보 대책	161억엔(+ 69억엔)
구급 의료 대책	100억엔(+ 10억엔)
간염 종합 대책 (인터페론(interferon) 치료 의료비 조성 제도 신설 등)	207억엔(+132억엔)

- 재해에 강한 마을 조성(「희생자 0」를 목표로)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주택·건축물 내진 개수 등 사업	170억엔(＋ 33억엔)
재해 risk의 증가 대비 수해·토사 재해 대책	1,855억엔(＋254억엔)

-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의 정비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(아이를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의 기능 강화 등)	375억엔(＋10억엔)
모자 보건의료 대책 등 종합 지원 (server 의료 네트워크 등의 정비)	48억엔(＋ 6억엔)

○ 지구 환경과 양립하는 사회로의 전환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쿄토 mechanism credit 취득 사업	37억엔(＋19억엔) (특별회계 포함 시 308억엔(＋179억엔)
기업의 지구 온난화 방지 지원	31억엔(＋21억엔)
超長期 주택 선도적 모델 사업	130억엔(신규)

○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의 확립

항 목	예산액 및 증감
교직원 정수 1000명 증원, 외부 인재 활용 사업(퇴직 교원 등 7000명 활용)	52억엔(신규)
학교 지원 지역 본부 사업	50억엔(신규)
school social worker 활용 사업	15억엔(신규)

□ 예산의 효율화

○ 수의계약의 재검토 철저·강화

- 각 府省의 수의계약 재검토 사례를 파악하여 예산 단계에서 단가·발주 수량의 재검토, 사업의 폐지 등을 도모
- 이를 통해 381억엔 삭감(2007년도에는 106억엔 삭감)

○ 예산 집행 조사 결과의 반영

- 2007년도에 예산 담당자 스스로가 집행 상황을 조사하고 사무 사업이나 제도의 필요성 등의 검증을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, 62개의 사업 중 7개 사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
- 이를 통해 342억엔 삭감(2007년도에는 288억엔 삭감)

○ 회계 검사원 지적 사항 반영의 철저·강화

- 2006년도 결산 검사 보고에서 지적된 금액(310억엔) 중,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을 철저히 예산에 반영(152억엔 삭감)

○ 독립 행정법인에 대한 지출의 재검토

- 독립 행정법인 정리 및 합리화 계획의 책정과 동시에 독립 행정법인에 대한 지출을 정밀 조사하여, 전년 대비 1,569억엔 삭감(▲ 4.2%)
- 2008년도의 독립 행정법인에 의한 국고납부 액수 278억엔을 포함하여 1,847억엔의 재정공헌 달성

○ 지출 구조 개혁

<방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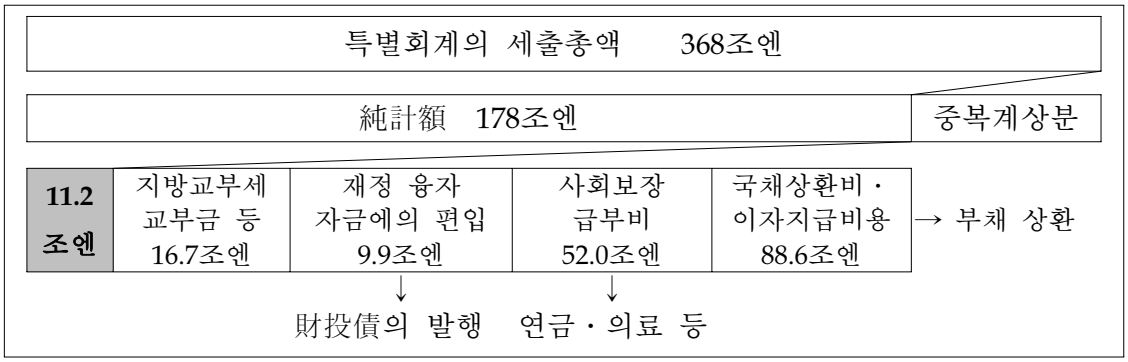
- 5년간 약 15% 정도의 지출 감축 목표 설정
- 장비품 조달에 대해 제3자 감시 강화, life cycle cost 관리 강화

<공공 사업>

- 지출 구조 연간 약 15% 개선을 목표로 연내에 새로운 프로그램 책정
- 일반경쟁 입찰의 확대 등의 입찰 개혁, 수의계약의 재검토,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입찰 개혁 촉진

○ 특별 회계의 재검토

- '재정투융자특회'의 준비금 중 9.9조엔을 국채의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기여
- 특별 회계 세출 총액 368조엔 가운데 11.2조엔을 국채상환비·이자지급비용, 사회 보장 급부, 지방 교부세 교부금 등을 제외한 사업에 책정



3. 세입 및 분야별 예산

가. 일반회계 세입

□ 조세수입

○ 일반회계 조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0.2%(약 870억엔) 증가

- 이는 주로 법인세(2.2% 증가), 상속세(3.1%), 톤세(11.1% 증가)에 기인
- 소비세, 주세 등도 증가하였으나, 담배세, 항공기연료세, 석유석탄세 등은 감소

<표 III-4>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산

(단위:백만엔)

구 분	'07년도예산액 (당초) (A)	'08년도개산액 (B)	비교증감액 (B-A)	증가율 (%)
세 입				
1. 조세 및 인지수입	53,467,000	53,554,000	87,000	0.2
2. 기타 수입	4,009,808	4,159,340	149,532	3.7
3. 공채금	25,432,000	25,348,000	- 84,000	- 0.3
합 계	**82,908,808**	**83,061,340**	**152,532**	**0.2**
세 출				
1. 국채비	20,998,807	20,163,230	- 835,577	- 4.0
2. 지방교부세부금 등	14,931,618	15,613,609	681,991	4.6
3. 일반세출	46,978,383	47,284,501	306,118	0.7
합 계	**82,908,808**	**83,061,340**	**152,532**	**0.2**

자료: 재무성, 2007.12.

<표 III-5> 2008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

(단위: 억엔)

세 목	전년도 예산액		08년도개산액	비교증감(△)액	
	당 초(A)	보정 후	(B)	(B-A)	신장률(%)
원천소득세	133,070	129,650	131,480	- 1,590	- 1.2
신고소득세	32,380	31,330	31,310	- 1,070	- 3.3
(소득세 계)	(165,450)	(160,980)	(162,790)	- 2,660	- 1.6
법인세	163,590	159,630	167,110	3,520	2.2
상속세	15,030	15,030	15,500	470	3.1
소비세	106,450	105,720	106,710	260	0.2
주 세	14,950	14,950	15,320	370	2.5
담배세	9,260	9,260	8,940	- 320	- 3.5
휘발유세	21,350	21,350	20,860	- 490	- 2.3
석유가스세	140	140	140	0	0.0
항공기연료세	930	930	890	- 40	- 4.3
석유석탄세	5,330	5,330	5,210	- 120	- 2.3
전원개발촉진세	3,460	3,460	3,480	20	0.6
자동차중량세	7,160	7,160	7,150	- 10	- 0.1
관 세	9,290	9,290	9,390	100	1.1
톤 세	90	90	100	10	11.1
인지수입	12,190	12,190	11,950	- 240	- 2.0
일반회계 계	**534,670**	**525,510**	**535,540**	**870**	**0.2**

자료: 재무성, 2008. 1.

□ 국채발행

○ 국채발행액은 2007년도에 비해 840억엔 감소

<표 III-6> 2008년도 국채발행액

(단위: 억엔)

07년도 당초(A)	07년도 보정 후	08년도 예산안(B)	증감액(B-A)
254,320	254,320	253,480	- 840 (- 0.3%)

자료: 재무성, 2008. 1.

나. 주요 분야별 예산

□ 사회보장관계비

○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의사 확보 대책, 간염 대책, 저출산 대책 등에 집중

□ 공공사업관계비

○ 지역의 자립·활성화나 국민의 안전·안심의 확보 등의 과제를 중점사항으로 하며, 신축성 부여를 통하여 중점화·효율화 도모

○ 지출 구조 개혁이나 입찰·계약 제도의 철저한 개혁을 도모하면서, 사회자본의 장기 수명화 등 기존 stock의 효과적 활용방안 적극적 모색

□ 지방재정관계비

○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보정에 따라 국세 수입 증가에 의한 교부세 자원의 증가요인(2007년도 2.1조엔)이 사라졌으나,

○ 국가·지방간 재정 건전화 균형 확보를 통해 출구 기반(지방재정 계획 기반)의 지방 교부세 총액을 적절히 확보하며, 특히 지방특례 교부금을 대폭 증액

□ 문교 관계비

○ 「기본방침 2006」에서 정해진 세출 삭감 방침을 견지하면서, 「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의 확립」을 위한 시책에 중점

□ 과학기술관계비

○ 어려운 재정사정 하에서도 과학기술 진흥비 증액을 확보하는 등, 젊은 인재 육성이나 국가 기간 기술 등 성장력의 근원이 되는 시책에 중점

□ 방위관계비

○ 유가 상승 등 속에서도 예산에 신축성을 기해 방위관계비 6년 연속 감액

□ ODA(정부개발원조) 관계비

○ 「기본방침 2006」에 따라 일반회계 ODA 예산에 대해서는 개혁을 계속하면서도, ODA 전체 사업량은 적절히 확보

□ 농림수산관계비

○ 농정 개혁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, '품목 횡단적 경영 안정 대책' 등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「음식의 안전·안심」, 「지구 온난화 방지」등의 제 과제에 대응

□ 중소기업관계비

○ 중소기업의 지혜와 의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지역·경제의 활성화 도모

○ 중소기업 금융의 기반 강화, 하청 적정 거래 추진, 사업 승계 지원, 중소기업자와 농림 수산업자와의 제휴에 관한 시책 등에 중점 배분

□ 에너지관계비

○ 에너지 수급의 핍박이나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의 여러 정책 과제에 대응하면서 예산의 신축성을 철저히 한 결과,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액은 다소 증가

○ 또한 에너지 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집중을 도모하며 억제

<표 Ⅲ-7> 2008년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

(단위: 억엔)

항 목	전년도 예산액 (당초) (A)	08년도 예산액 (B)	비교증감액 (B-A)	증가율 (%)
사회보장관계비	21,140,896	21,782,434	641,538	3.0
문교 및 과학진흥비	5,285,600	5,312,188	26,588	0.5
국채비	20,998,807	20,163,230	- 835,577	- 4.0
공제연금관계비	923,505	852,227	- 71,278	- 7.7
지방교부세교부금	14,619,635	15,140,120	520,485	3.6
지방특례교부금	311,983	473,489	161,506	51.8
방위관계비	4,801,306	4,779,650	- 21,656	- 0.5
공공사업관계비	6,947,279	6,735,151	- 212,128	- 3.1
경제협력비	691,271	665,983	- 25,288	- 3.7
중소기업대책비	164,009	176,051	12,042	7.3
에너지 대책비	864,284	865,509	1,225	0.1
식료안정공급관계비	855,460	858,179	2,719	0.3
산업투자특별회계에의 이월	20,286	-	- 20,286	-
기타 사항 경비	4,934,487	4,907,129	- 27,358	- 0.6
예비비	350,000	350,000	0	0.0
합 계	**82,908,808**	**83,061,340**	**152,532**	**0.2**

자료: 재무성, 2007.12.

4. 세제개편

법인·중소기업 관련 세제, 금융·증권 세제, 토지·주택 세제, 공익 법인 제도 개혁에 대응하는 세제 조치 강구, 기부 세제 재검토, 지역간 재정력 격차 축소를 위한 조치 등을 통해 총 40억엔의 세수 감소 효과 발생

□ 경제 활성화·경쟁력 강화, 중소기업·벤처 지원

○ 연구 개발 세제·정보화 기반 강화 세제

- 연구 개발 세제에 대해, 시험연구비 총액 관련 항목을 세액공제(법인세액수의 20% 한도)에 추가
- 시험 연구비의 증가액과 관련되는 세액공제 및 매상고에 차지하는 비율이 10%를 초과하는 실험 연구비 관련 세액 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신설(법인세액수의 10% 한도)
- 정보화 기반 강화 세제에 대해서, 대상 소프트웨어 범위의 확대, 대기업에 대해 대상이 되는 투자액에 상한 마련, 정보화 기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 하한액수 인하

  (현행 300만엔 => 230만엔)

○ 중소기업·벤처 지원

- 교육 훈련비 증가 시 특별 세액공제 인정해 주는 특례 대상을 중소기업에 집중
- 노동 비용 중 교육 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.15%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비의 총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
-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충을 위해 Angel 세제 대폭 확대
- 설립 3년 내에 일정한 특정 중소 회사에 출자 시 기부금공제 적용 인정하는 제도 신설(1,000만엔 한도)

○ 사업 승계 세제

-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승계를 위해, 거래 시세가 없는 주식 등과 관련되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 제도를 신설

  ·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일정한 의결권 주식 등에 관련된 과세가격의 80%에 대해 상속세의 납세 유예

  · 2009년도 세제개정에 대비해, 「사업계속원활화법(가칭)」 시행일(2008. 10. 1 예정) 이후의 상속 등에 소급 적용

○ 톤수 표준 세제

- 안정적인 국제 해상운송 확보 및 일본 선적 등의 계획적 증가 도모 위해, 일본 선적과 관련되는 간주 이익 과세(톤수 표준 세제) 신설

○ 감가상각 제도

- 항목수가 많은 기계·장치를 중심으로 자산 구분을 정리하는 한편, 사용실태를 근거로 해 법정 내용연수 재검토

- 아울러, 내용연수의 단축 특례 제도에 대해 승인신청의 사무 부담을 고려하여 수속 간소화

□ 민간이 담당하는 공익 활동의 추진, 기부 세제의 확충

○ 공익사단·재단법인에 대해 공익 목적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함과 동시에, 모든 공익사단·재단법인을 기부 우대의 대상이 되는 특정 공익 증진 법인으로 함.

○ 공익 목적 사업의 시행 위한 수익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전액 손금 산입 인정

○ 특정 공익 증진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한도액 대폭 확대

- 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의 5%로 인상(현행 2.5%)

○ 인정 NPO 법인 제도에서의 인정 요건을 완화. 또한,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(현행 2년) 등 신청 수속의 부담 경감

□ 지역의 활성화

○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시정을 위한 잠정 조치로서, 법인 사업세의 일부를 분리해 지방법인 특별세 및 지방법인 특별양여세 신설

○ 농림 수산업과 상공업의 제휴 등을 도모해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사업 활동을 시행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상 조치 정비

- 「중소 농상공 제휴 촉진법」(가칭)의 제정에 수반하는 중소기업 등 기반 강화 세제의 확충 등

□ 금융·증권 세제

○ 금융 소득의 통합화를 위해 상장 주식 등의 양도이익·배당과 관련되는 7%(주민세 포함 10%) 경감 세율을 2008년말에 폐지

- 2009년 이후에는 15%(주민세와 포함 20%)

○ 그 과도기적 조치로서 2009~2010년의 2년간 500만엔 이하의 양도이익 및 100만엔 이하의 배당에 대해 7%(주민세 포함 10%) 세율 적용

○ 개인투자가의 주식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해 2009년부터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과 배당 사이의 손익 통산 구조 도입

□ 토지·주택 세제

○ 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선 촉진 세제(주택융자 공제 제도의 특례) 신설

○ 신축되는 장기 내용연수 주택(「200년 주택」) 관련 등록 면허세 경감 제도 신설

○ 토지 매매 관련 등록 면허세(원칙 20/1000)에 대해 3년간 경감세율 적용

- 2009년 3월 31 일까지 : 10/1000
- 2010년 3월 31 일까지 : 13/1000
- 2011년 3월 31 일까지 : 15/1000

□ 도로특정재원

○ 「도로특정재원 재검토」(2007년 12월 7일 정부·여당간 합의)에 근거하여, 휘발유세, 지방도로세, 자동차 중량세 세율 특례조치 적용기한 10년 연장

□ 원활·적정한 납세를 위한 환경 정비

○ 납세자 편리 향상 도모 위해, 장래 체결 예정인 거래를 사전 조회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사전 조회에 대한 문서 회답 수속 개선

○ 전자 신고에 있어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

○ 과세의 적정화 도모 위해, 외환 증거금 거래(FX 거래) 등에 관한 자료 정보 제도 정비

<표 Ⅲ-8> 2008년도 세제개정(내국세관계)에 의한 일반회계 세수변동 예상액

(단위 : 억엔)

개 정 사 항	2008 (증감예상액)	2009
1. 법인관계세제 등		
1) 연구개발세제 확충	- 330	- 430
2) 정보기반강화세제 재검토	230	230
(중소기업분)	(- 40)	(- 50)
3) 교육훈련비 관련 특별세액공제제도 재검토	100	110
4) 농림 수산업과 상공업의 제휴 등 촉진 위한 세제 조치 창설 등	- 20	- 20
계	- 20	- 20
2. 금융·증권세제		
상장주식 등 관련 배당 등의 7 % 경감 세율 폐지	-	*1)3,090
3. 토지·주택세제		
1) 토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율 경감 조치 재검토	-	*2)770
2) 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선 촉진 세제 창설	0	*3)- 20
계	0	750
4. 기부세제		
특정 공익 증진 법인 등 관련 기부금의 손실금 산입 한도액 인상	- 10	- 10
5. 기타		
1) 사회 의료법인 관련 세제 조치 창설	0	- 60
2) 외항 해운 사업자의 일본 선적에 의한 수입금액 과세 특례 창설	0	- 70
3) 기타	- 10	10
계	- 10	- 120
합 계	**- 40**	**3,600**

주: 1) 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배당 등의 7% 경감 세율의 폐지에 따른 2009년도 예상증가액은, 특례 조치 종료 후(2011)의 제도에 의함.

2) 토지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세율의 경감 조치의 재검토('08년도 10/1000, '09년도 13/1000, '10년도 15/1000)와 관련되는 2009년도 증수 예상액은, 세율 15/1000에 의함.

3) 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선 촉진 세제의 창설과 관련되는 2009년도 수입 감소 예상액은, 공제 대상 기간 전체에 있어서의 수입 감소 예상액수의 합계액을 계상.

자료: 재무성, 2008. 1.

<참 고> 일본 대장성 개혁 사례

□ 개 요

○ 1998년 대장성 개혁 당시 대장성은 정책입안, 재무, 세정, 금융 등 경제의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거대한 조직이었음.

○ 이러한 대장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, 당시의 외환위기 등 지속적 경제위기 및 그에 대한 여론의 질타 그리고 그에 의한 정치적 동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됨.

□ 개혁의 구체적 배경

○ 정책실패와 금융산업의 위기

- 당시 일본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이었던 주택전문회사 및 그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문제에 있어서의 정책실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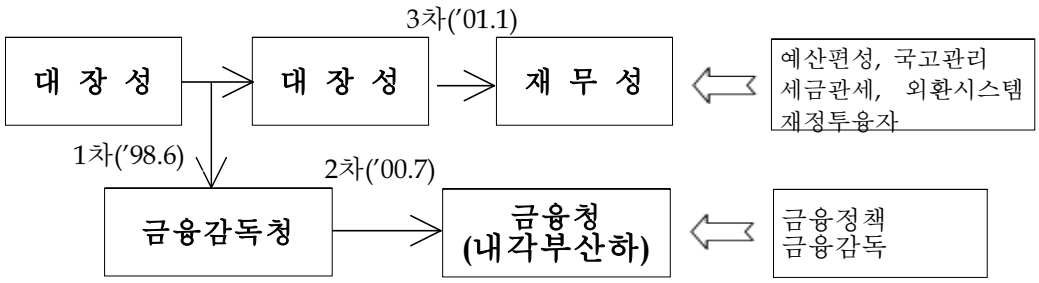
○ 관료부패문제

- 대장성 관리들과 MoF단(대장성 출입 은행직원단) 간 유착관계의 폐해

○ 하시모토의 개혁정치와 대장성 개혁문제의 정치이슈화

- 재정·금융 분리 구상과 검사감독권 분리 문제에 대한 정치적 시도
- 제14대 중의원 선거에서의 이슈화
- 새로이 출범한 하시모토 총리(자민당) 내각의 정치적 약속에 의한 추진

□ 대장성 해체과정



□ 한계점

○ 일부 기능 분리 정도에 그쳤을 뿐,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해체에까지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견해

○ 당초 개혁의 목적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컸다는 한계